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위드코로나 시대의 공생전략 |
| 이슈분석 |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과 함께 리스크 극복도 중요
Wealth Transfer 가속화와 금융회사의 대응
제도 개선에 따른 ESG 경영의 본격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범과 과제
위드 코로나 시대, 소비 및 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인플레이 압력·통화정책 정상화로 상승기조 유효
외 환: 지연된 '회복'과 당겨진 '긴축'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관망세로 인해 상승폭 축소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김효섭(hyosupk)

논단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이슈분석

연구위원 정유탁(jungyt)

연구위원 주윤신(jsju)

연구위원 정희수(heesoo_jung)

연구위원 류창원(cwryu)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수석연구원 이화정(hj_lee89)

외 환 | 연구원 윤지선(jisun.yun)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최제민(jemin.choi)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hyosupk@hanafn.com)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위드코로나 시대의 공생전략
- 04 **이슈분석**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과 함께 리스크 극복도 중요
Wealth Transfer 가속화와 금융회사의 대응
제도 개선에 따른 ESG 경영의 본격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범과 과제
위드 코로나 시대, 소비 및 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
- 14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인플레이 압력·통화정책 정상화로 상승기조 유효
외 환: 지연된 '회복'과 당겨진 '긴축'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관망세로 인해 상승폭 축소
- 20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위드코로나 시대의 공생전략*

장 보 형 선임연구원 (jangbo@hanafn.com)

위드코로나 초입부터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이 다시 강화되는 등 혼역을 치르고 있다. 과연 2022년 새해에는 코로나와 안정적인 공생이 가능할 것인가? 미시기생이라는 전염병의 위력은 대부분 그 기저에서 지배-피지배 관계 혹은 사회경제적 건강성으로 대변되는 거시기생과 상호작용하며 역사를 움직여 왔다. 따라서 위드코로나를 맞아, 공생의 대상은 그저 코로나에만 국한될 수 없다. 대선을 맞아 코로나의 그늘을 걷어내고 사회경제적 건강을 담보할 대담한 경제정책 실험을 기대해 본다.

❖ 출구전략보다는 공생전략

지난 11월 위드코로나 개시 이후 도리어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자가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오미크론이라는 전염력 강한 신종 변이도 창궐하면서 우려를 증폭시키는 실정이다. 백신접종 완료율이 80%를 넘고 부스트 샷도 국민의 1/3이 접종했지만, 코로나 여파는 좀처럼 그치질 않는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는 경구가 실로 절감되는 상황이다.

이미 2년여의 코로나 악몽을 견디고 2022년 새해를 맞은 지금, 과연 코로나와 공생하는 일이 가능할까? 사실 위드코로나는 위다웃(Without) 혹은 제로 코로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한, 아니 강요 받은 자구책에 불과하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생이나 경제 걱정이 앞서기도 했겠지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풀려 나간 막대한 유동성이나 각종 지원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따라서 단계적 방역완화를 통한 일상의 회복과 경제, 나아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방역 재강화에서 보듯이 출구전략은 울퉁불퉁한 여정일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공생전략이다. 오미크론이 코로나 종식을 알리는 서막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여전히 상당기간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경고가 지배적이다. 나아가 자연 생태계나 기후 변화와 맞물린 신종 전염병의 창궐과 각종 자연재해의 위협은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 당장의 코로나 퇴치 이상으로 중장기적 안목에서 코로나와 같은 낯선 도전과의 공생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보인다.

위드코로나는 위다웃 코로나가 아니다.

출구전략보다 공생전략이 필요하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미시기생과 거시기생의 공생

우리 시대의 위대한 역사가로 평가 받는 윌리엄 맥닐은 <전염병의 세계사>를 통해 인간 숙주와 기생생물(전염병)의 갈등과 균형이 인류의 숙명이 라고 진단하며, 인류가 감염증과 상호 작용해 온 역사로서 세계사의 숨겨진 차원을 분석한다. 여기서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인류 역사를 좌우하는 동력으로서 미시기생과 거시기생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미시기생과 인류의 역사

미시기생은 우리가 익히 체감하듯이, 자기 유전자 보전을 위해 인간이라는 숙주를 활용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행태를 의미한다. 장기간의 적응 과정을 통해 인간과 안정적인 공생관계로 접어든 장내 박테리아나 유행성 독감 등의 유형도 있지만, 세계사를 요동치게 했던 흑사병과 같이 인간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유형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나 홍콩 독감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세상을 흔들었지만, 결국 인간과 공생관계로 진화하면서 계절성 풍토병으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배-피지배 관계의 거시기생

반면 거시기생은 대형 포식동물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비롯되었지만, 인류의 진화와 함께 인간 집단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로 확산되어 왔다. 인류의 역사를 장식했던 각종 전쟁이나 침략, 정복과 저항 등의 충격은 이러한 거시기생의 변천을 대변한다. 늘상 생존과 번식이나 번영을 위해 숙주를 공략하지만, 정작 치명률이 높아 숙주(피지배자)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면 기생체(지배자)도 몰락하는 식으로 거시기생의 역학 균형이 바뀌곤 했다.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거시기생의 파괴력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갈등, 그리고 다양한 불공정이나 불평등 이슈 등은 그 위력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미시기생과 거시기생의 약순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시기생과 거시기생의 공생과 상호작용이다. 거시기생의 부조화가 심각해지면 미시기생에 취약해지고, 또 미시기생에 시달리면 거시기생도 교란되는 결과를 빚는다. 사실 코로나 충격도 그저 보건위기만이 아니라 경제위기, 사회위기의 성격이 강하다. 감염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 문제는 물론이고 경제 활력 저하, 부실한 사회안전망, 부채 및 부실 누증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건강이나 안전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IMF도 코로나의 교훈으로 “건강이 개인 복리에 중요한 만큼 공중의 건강도 안정적이고 응집력 높은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과 “인류의 건강과 경제적 건강 사이의 상호 불가분한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 아주 오래된 노멸의 부활?

위드코로나는 일상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제약은 여전하고, 지금처럼 언제라도 유예될 수 있는 잠정 이벤트에 그칠 공산도 크다. 오히려 코로나와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선부른 정상화의 욕구에 기반한 출구전략의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사실 우리에게 공생의 대상은 단지 코로나만이 아니다. 코로나 직전이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기생충> 영화가 세상의 이목을 끈 바 있다. 미시기생 차원의 코로나 충격을 넘어서, 코로나 이전부터 켜켜이 쌓여 온 불평등과 불공정, 불균형으로 만연된 거시기생 문제도 주의를 요구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보건과 안전을 비롯하여 육아와 교육, 운송 및 기타 개인서비스 등의 사회적 필수서비스들은 여전히 정상화의 뒷전에 놓여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은 뉴노멀 혹은 코로노멀의 어두운 그늘이다.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보자면, 코로나 충격과 맞물린 작금의 시련은 지난 20세기 초의 악몽과 비교된다. 당시 산업혁명의 수혜를 누린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각축전은 1차 세계대전의 참상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스페인 독감과 국제 정치질서의 와해, 또 주요국의 거듭된 정치불안이 대공황과 맞물려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 문명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도 했다. 지금도 코로나 와중에 첨단 기술소재·부품을 둘러싼 공급망 문제를 갖고 이른바 ‘신뢰가치사슬’(TVC)이라는 미명 하에 진영 논리로까지 번지고 있는 미중 갈등은 당시의 협상국 대 동맹국(1차 대전), 연합국 대 추축국(2차 대전)과 같은 합종연횡의 참담한 아노미를 연상케 한다. 어쩌면 뉴노멀이 아니라 현대 초기의 아주 오래된 노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닐까?

그나마 20세기 초의 비극을 다스리고 새롭게 희망의 꽃을 피운 것은 미국의 뉴딜이라는 새롭고 대담한 경제정책 실험이었다. 금본위제나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대한 맹신 등 구습에 젖은 경제정책의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경제 희생이나 민주주의의 부활은 요원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양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와 분리되긴 했지만, 1950~60년대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단초를 놓은 것도 뉴딜의 효과였다. 한강의 기적도 그 덕분이었다고 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나라도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모쪼록 그 과정을 통해 코로나의 짙은 그늘을 걷어내고 미시기생과 거시기생의 악순환을 타개해 나갈 과감한 경제정책 토론과 실험을 기대해 본다. 

위드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어두운 그늘

20세기 초의
오래된 노멸의
부활인가?

뉴딜과 같은
대담한 경제정책
실험이 필요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과 함께 리스크 극복도 중요

정 유 탁 연구위원(jungyt@hanafn.com)

2022년 대내외 경제는 위드 코로나로 대표되는 방역체계의 전환 속에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방역 경계심 완화, 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 등으로 위드 코로나의 일방적인 추진은 쉽지 않은 가운데 위드 코로나가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에도 정책 정상화, 수요측 물가압력, 지정학적 갈등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2년 경제 방향과 관련하여 위드 코로나의 성공 여부와 함께 리스크 극복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방역 부작용 및 코로나 인식 변화 속에 백신 보급 확대 등에 힘입어 위드 코로나 추진

-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확진자 억제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피로감 누적 등의 부작용 심화
-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 보급 확대를 기반으로 주요국에서 위드 코로나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백신 완료율이 80%를 넘어서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21.11월)
 - 코로나를 중대한 질병(pandemic)에서 일상적 질병(endemic)으로 인식하고, 방역체계를 확진자 억제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로 전환하면서 방역·경제 간의 균형 모색
- 위드 코로나 추진에 따른 방역조치 완화는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 개선 및 소비활동 증가로 연결되면서 대면 소비·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회복 강화 기대
 - 대면접촉 시설 중심의 방역 완화로 대면 소비·서비스업의 수혜가 예상되며, 내구재 소비의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추세를 상회하는 급증세 등으로 영향 제한적일 듯

■ 다만, 방역 경계심 완화, 백신효과 저하, 신종 변이 등이 위드 코로나의 걸림돌로 작용

- 위드 코로나 추진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이동성 증가와 방역 경계심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 재확산의 불가피한 측면 존재
-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저하 및 돌파감염 우려 등도 위드 코로나 추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실제로 주요국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며 방역조치가 재차 강화되고, 우리나라 역시 위중증자 급증 등으로 방역조치 일부 되돌림
- 더욱이 백신 보급이 부진한 신흥국이나 저소득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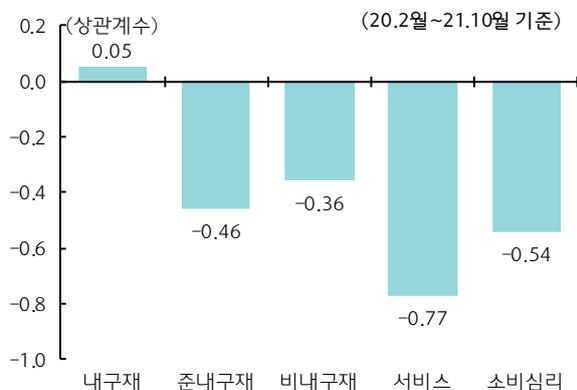
■ 위드 코로나 속에 정책 정상화, 물가 압력, 지정학적 갈등 등 잠재적 리스크에도 유의

- '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 재정확대 및 통화완화가 이루어졌으나, 위드 코로나 및 경기여건 개선 등으로 '22년에는 대응책 정상화 가속 예상
- 특히, 코로나 이후 금융시장이 저금리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및 금융여건 변화, 그에 따른 신흥국 불안과 대내 취약차주 신용리스크 등에 주의
-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생산활동 재개가 가속화되면 공급망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수요측 압력이 부각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은 지속될 가능성
- 한편, 코로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리앉아 있던 美·中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주목할 필요
 - 바이든 집권 이후 G2 갈등이 관세를 넘어 인권·기술·환경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두 국가를 중심으로 여타 국가들이 집결하는 '진영화'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

■ 위드 코로나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와 더불어 리스크 극복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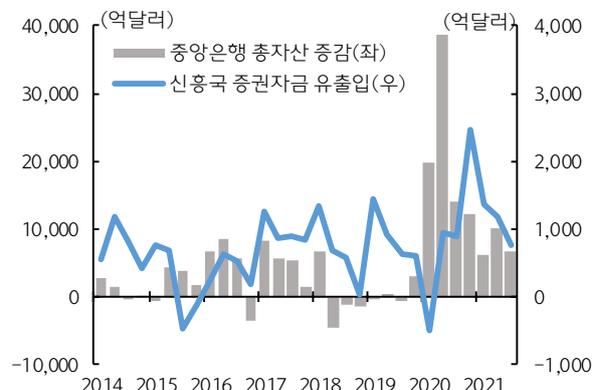
- 2022년 대내외 경제는 코로나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방역체계 전환(위드 코로나)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
-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방역체계 전환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와 함께 정책 정상화 및 그에 따른 경제·금융여건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도 주목
- 나아가 코로나 위기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 속에 2022년은 중장기 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입의 원년이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 코로나 위기 이후의 디지털·그린 경제 확산, 공급망 재편 등 구조변화 대응과 신성장동력 마련 여부가 향후 성장 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방역 강도와 소비 부문별 상관성



주 : 정책엄격성지수 변화(MoM)와 부문별 증가율(MoM)의 상관관계
 자료 : Our World in Data, 통계청,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요 중앙은행 자산 증감과 신흥국 증권자금 유출입



주 : 주요 중앙은행은 Fed, ECB, BOE, BOI 기준
 자료 :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21.12월)

Wealth Transfer 가속화와 금융회사의 대응

주윤신 연구위원(ysju@hanafn.com)

종합부동산 및 양도소득세 관련 강화된 세제 개편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자녀 세대에 대한 상속/증여가 크게 증가하는 등 세대간 부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 글로벌 금융회사는 가족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자녀와의 관계 구축을 위한 2세대 마케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도 부의 세대 교체에 대비한 효과적인 전략의 수립·실행이 향후 금융회사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세대간 부의 이전(wealth transfer) 가속화와 맞물려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실행 여부가 향후 금융회사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

- 전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자녀 세대에 대한 상속/증여가 증가하면서 X세대 및 밀레니얼 등 젊은 계층으로의 부의 이전이 본격화
 - Cerulli Associates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25년에 걸쳐 전체 부의 76% 수준인 53조달러를 X세대(31조달러) 및 밀레니얼 세대(22조달러)로 이전할 것으로 추정
- 부의 이전은 부모로부터 자녀 세대로의 자산 이전뿐만 아니라 트렌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금융회사에서 타 금융사로 고객 자산이 이전되는 효과도 존재
- 실제 부의 이전 과정에서 상속/증여받은 자녀 등이 주거래 금융회사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에 기회인 동시에 위기로 작용

■ 글로벌 금융회사는 HNW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부의 이전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

- 상속에 따른 자금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증여자 대상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주력
- 특히, HNW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외 승계, 자금조달, 사회공헌 등 가족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강화
 - 스위스 Julius Baer는 HNW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투자관리 외 재무설계(은퇴, 상속/증여 등), 자금조달, 기업금융 자문, 자선활동 지원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
 - UBS는 복잡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UHNW와 가족을 대상으로 전세계 다양한 투자기회와 재무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GFO(Global Family Office)의 기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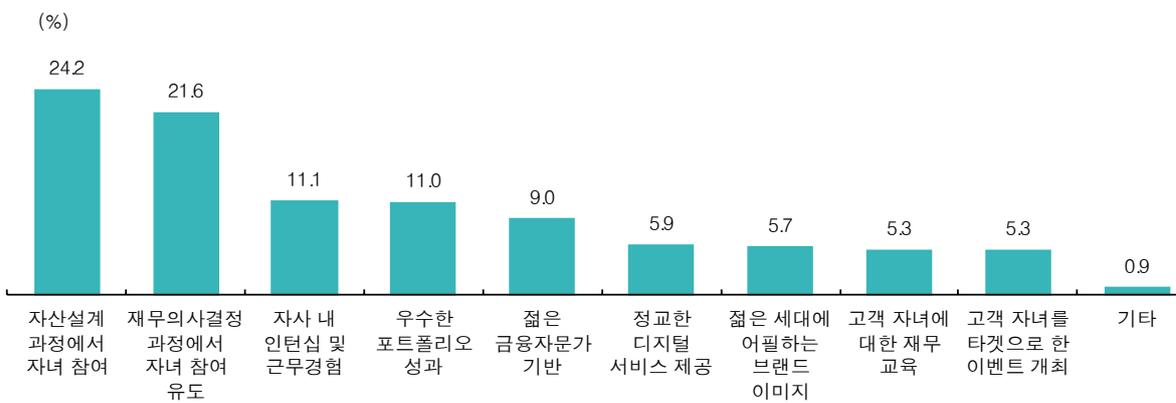
■ 특히, 젊은 계층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 이전 시점부터 자사 HNW 고객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2세대 마케팅을 확대

- 소비성향, 재정상태, 금융행태 등 다방면에서 기존 세대와 구분되는 밀레니얼 등 젊은 계층을 유인하기 위해 이들 고객의 특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
 - IT에 친숙한 젊은 세대 고객의 특징을 고려해 HNW 전용 자산관리 플랫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메세징 플랫폼,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는 등 HNW 고객여정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경험을 강화
 - 젊은 세대가 중시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 2세대 고객과의 관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상속/증여, 기업 승계뿐만 아니라 매일의 재무의사결정 과정에 고객 자녀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이들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인력 운용 및 리브랜딩 캠페인 시행
 -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고객 니즈를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2세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젊은 전문가 인력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

■ 최근 강화된 세제로 자녀 등에 대한 상속/증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국내 금융회사도 부의 세대 교체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 노력 필요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를 시행하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자녀 세대에 대한 상속/증여가 크게 증가
 -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 해 상속/증여 방식으로 이전된 부의 규모가 7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년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금융회사도 부의 세대 교체 과정에서 고객 자산이 경쟁사로 이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신규 고객 자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 전략 수립이 필요 

■ “상속/증여 후 HNW 고객 자녀의 타 금융회사 이전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 관련 서베이 결과



자료 : Global Data's 2018 Global Wealth Managers Survey

제도 개선에 따른 ESG 경영의 본격화

정희수 연구위원(heesoo_jung@hanafn.com)

오는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ESG 정책이 본격화될 것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탄소감축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ESG 투자 활성화, ESG 정보 투명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제주체들은 선언적인 ESG 경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도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능동적 감시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 '22년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ESG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제정하고 9월에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
-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공정한 전환, 제도적 기반 등 4대 중점분야에 11.4조원의 재정투입
 - '22년 중 2.4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해 탄소감축 사업에 집중 투자
- 또한, 정부는 기후리스크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금융권 기후리스크 포럼 등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
 - '22년 중 기후경제 시나리오 설정 및 기후경제통합모형에 따른 건전성 변동 등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범 실시할 계획

■ 정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ESG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

- 정부는 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기후대응보증 제도 신설, 탄소스프레드 지원, 개인 대상 탄소 포인트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
 - 산은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재편, ESG 경영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또한,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구축하고 ESG 전용펀드 신설, ESG 지수연계 투자상품 출시, ESG채권 발행을 유도
 - 이와 함께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
-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ESG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주도하고 K-ESG 정보 플랫폼을 통해 ESG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이러한 정책 하에서 기업의 ESG 경영은 선언적인 단계에서 벗어나 실행단계로 전환

- 지난해까지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ESG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ESG 전담 부서 또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
- 최근 ESG 경영은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 부문의 적용범위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environment) 부문에 집중되는 모습
 -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환경(E)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에 대한 균형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
- ESG 경영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

■ 금융권에서도 ESG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집중할 필요

-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주체인 동시에 기업의 ESG 활동과 관련한 능동적인 감시자 역할을 본격 수행할 것으로 예상
- 그 동안 금융회사의 공공적 특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 온 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 금융회사는 ESG 펀드, ESG 채권, 지속가능연계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ESG 평가기반의 심사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함
 - 이를 통해 고객이 ESG 경영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 

■ 2022년 ESG 관련 정책 도입 방향

구분	주요 내용
민간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 제3차('21~'25) 할당계획 변경 검토 ·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의 위탁매매 허용 및 장내 파생상품 도입(~'25) · 탄소중립 기여업체를 선별·우대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충』 신설 ('22년 1조원) · 산은 탄소스프레드 지원(5조원), 녹색금융 이차보전(143억원) · 개인 대상 『탄소 포인트제도』 적용범위 확대
녹색국채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시장 영향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실시('22년 상반기)
ESG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구축 · ESG 평가기관 가이드선, 사회적채권 발행 가이드라인 마련 · ESG 전용펀드 신설 및 모태펀드에 ESG 관점의 심사체계 시범 도입('22년 상반기) · ESG 지수연계 투자상품 출시 유도, ESG채권(사회적책임투자:SRI),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 검토
민간의 자발적인 ESG 경영 유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SG 가이드라인 구체화('22~'23) : 공통항목 →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 ESG 경영 우수기업 공공조달 참여 우대 등 · 환경, 고용 등 정보공개 제도와 ESG 공시 간 연계 방안 · 협력사의 ESG 경영지원 실적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K-ESG 정보 플랫폼 구축('21.12.20)

자료 : 기재부, 금융위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범과 과제

류 창 원 연구위원(cwryu@hanafn.com)

2022년 1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식 출범한다. 그간 정부에서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마이데이터의 근간을 마련했고, 금융부문에서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시로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간 데이터에 기반한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안착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금융정보가 API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의료 등 비금융 정보를 포괄하여 생활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 2022년 1월, 한달간의 시범 운영을 마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식 출범

- 정부는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금융부문은 선도적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산업)을 신설
 -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원본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마이데이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 의의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별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본허가를 받은 45개('21.10.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2021년 12월, 17개 사업자가 API방식을 통한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1월 정식 시행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범으로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

- 고객의 금융 비대면 접점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겸영·부수업무를 기반으로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할 전망
 -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라는 기본 업무외에 대출 중개 및 주선,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 겸영업무로 가능
- 금융회사는 상품 제조에 집중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판매채널 역할이 강화되면서 금융업의 제판분리가 가속화
- 이 가운데 빅테크는 대규모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 비금융 서비스에 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어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금융회사보다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유리할 전망

■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보안 우려 해소가 급선무

- 부정확한 정보가 나타나거나 업권간 정보 공유 미비로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나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소비자의 기본 효용이 크게 저하
 - 가령 보험 데이터의 경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상 정보 전송 범위가 주계약 기준 장기인보험으로 한정되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제외
 - 금융위원회는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의 정보는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스크래핑 방식에서 표준화된 API방식으로 전환시 정보 제공자와 가공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

■ 다양한 비금융 정보까지 결합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고도화할 필요

-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면서 기관과 공유할 정보의 범위 및 양을 확대
 - 미국은 민간기업중심의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된 가운데 최근 ‘서비스 스위칭 허용 법안’을 통해 데이터 이동성을 강조
 - 영국은 결제 데이터를 공개하는 ‘Open Banking’이 대출, 연금, 보험 등으로 확대되는 ‘Open Finance’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 에너지 산업 등의 데이터 공유도 모색
 - 일본은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정보은행’ 제도를 운영중이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 데이터 유통을 촉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반영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의료, 공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개별 업권법 개정 등의 법률 보완과 함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 

■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의향 ('21.3 조사)

구분	내용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용 의향	9.0%	55.6%	28.2%	5.0%	2.2%
관심 이유 (복수 응답)	· 내 정보를 한곳에 모음 (69%) · 지출/자산관리에 도움 (56.7%) · 포인트, 혜택 정보를 모음 (42.1%) · 온라인 및 앱 사용이 간편해짐 (33.1%) · 데이터의 주권을 내가 갖게됨 (24.9%) · 맞춤 상품 및 서비스를 추천받음 (24.1%)				
관심 없는 이유 (복수 응답)	· 개인정보 노출 우려 (59.7%) · 여러 곳에 있는 내 정보를 모을 필요 없음(25%) · 지출/자산관리에 큰 도움이 안 됨 (23.6%) · 데이터 주권이 잘 이해되지 않음 (19.4%)				

자료 : VISA, 마이데이터 소비자 인식 조사 ('21.3)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업권	주요 제공정보
은행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투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여전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등
통신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공공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 : 금융위원회

위드 코로나 시대, 소비 및 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

황 규 완 연구위원(gwhwang@hanafn.com)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그 동안 억눌려온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면서 음식업, 뷰티패션 산업의 펜트업 수요의 혜택이 기대된다. 다만, 팬데믹 기간 동안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소비자들의 이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는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의 온라인 전환으로 물류산업, 여행업 등에서는 시설보다는 서비스가 중시되거나 산업의 주도권이 이전되는 등 구조적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기조는 유지

- 우리 정부는 지난 11.1일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하는 등 위드 코로나 추진을 본격화 했으며 그 동안 억눌려온 오프라인 소비활동 재개가 기대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시간 규제 완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경제적 위험의 해소와 의료 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
- 오미크론 변이 발생, 확진자 급증 등으로 방역강화조치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정부는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생활규제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 위드 코로나 정책 기조는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
- 우리나라 외에도 백신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역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스터 샷 확대 등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도 적극 진행 중

■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구매행태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 가속될 전망

- 위드 코로나로 오프라인 경제활동이 재개될 것이나 지난 2년간 익숙해진 소비자의 구매행태가 이어져 펜트업 소비와 온라인 영향력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전망
 - 특히 그 동안 온라인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공연, 여행 등)이 수혜를 받을 전망
-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채널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전환이 고령층까지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의 온라인 영향력 강화는 위드 코로나에도 지속될 전망
 -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경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산업의 주도권이 오프라인 설비에서 온라인 서비스로 넘어가거나, 저부가가치 분야에서는 무인화가 진행되는 등 산업생태계 변화도 더욱 빨라질 전망

■ 이커머스, 디지털 콘텐츠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팬데믹 기간 동안 위축되었던 음식점, 패션·뷰티 산업은 펜트업 소비가 기대

- 팬데믹 시기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온라인 서비스가 안착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더라도 이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플랫폼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이커머스 취급품이 공산품 중심에서 신선식품으로 확대
 - 국내외 OTT 회사들의 서비스 진출 확대로 미디어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 영업시간 및 입장인원 제약이 완화되면서 음식점 이용객이 늘어나고 국내외 여행제한도 줄어들어 그 간 도외시 된 패션 및 뷰티산업의 펜트업 소비가 기대
 - 음식업은 재택근무 감소 등으로 입지여건에 따른 펜트업 소비 수혜 여부는 양극화

■ 물류산업, 여행업 등 일부 산업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도 진행될 전망

- 이커머스 간 경쟁 심화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 물류산업이 물류센터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풀필먼트 등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
 - 마이크로 풀필먼트, 다크 스토어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 물류시설 도입
- 개별여행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숙박 OTA가 주류 여행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숙박 OTA들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트래플 테크회사로의 진화를 추진
 - 여행업의 주도권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기존 여행사에서 숙박 OTA로 이동
-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 판매업과 같이 사람이 제공하는 부가가치가 적은 경우 무인 점포화가 진행 중이며 관련 산업 생태계도 꾸준히 생성될 전망 

■ 위드 코로나가 소비 행태 및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리: 인플레이 압력·통화정책 정상화로 상승기조 유효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2021년 시중금리는 경기 개선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등했으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선회로 장단기 금리차가 큰 폭 축소되었다. 2022년에는 국채 발행량이 소폭 축소될 예정이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한은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 상승이 완만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주장하는 최대 100조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될 시 10년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021년 대내외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급등했으나 변이 바이러스 충격으로 반락

- 2021년 대내외 금리는 상반기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물 중심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부각되며 장단기 금리차가 빠르게 축소
- 美 금리는 인플레 우려와 연준의 긴축 우려로 상승하다 변이 바이러스 충격으로 하락, 유로지역은 중기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다는 ECB의 평가 속 제한적 등락
 - 美/獨 국채 10년 금리(%): '20년말 0.91/-0.57 → 5.12일 1.69/-0.12 → 12.24일 1.49/-0.25
- 국내는 상반기 추경 시행 등 수급 부담으로 장기물 중심의 약세를 보였으나, 한은의 금리인상(2회, 50bp)에 이어 내년 추가인상 우려로 단기물 위주로 상승
 - 국고 3년/10년 금리(%): '20년말 0.97/1.72 → 8.25일 1.43/1.93 → 12.24일 1.80/2.20

■ 통화정책 운용 중심이 고용·경기회복→물가·금융불균형으로 이동하면서 본격 긴축 전환

- 美 연준은 11월 테이퍼링 개시에 이어 12월 FOMC에서 종전의 통화정책 전략을 수정하고 ‘인플레이션 파이터’ 복귀를 공식화하며 통화정책 가속화를 예고
 - 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AIT, '20.8월 개정)와 연계된 포워드가이드를 삭제하고 점도표 상 금리인상 경로를 대폭 상향조정하며 물가 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 시사
- 신흥국이 고물가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상한 가운데, 영국 등 선진국도 금리인상을 단행, ECB는 대출프로그램(PEPP)을 내년 3월 종료할 방침을 발표
- 한은 역시 마이너스 실질기준금리와 금융불균형을 이유로 '22년에도 인상기조를 이어갈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1/4분기와 3/4분기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예상

■ 2022년 시중금리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통화정책 정상화 속 완만한 상승 예상

- 정부는 '22년 국채 발행 한도(166조원)를 '21년(2회 추경 포함 180.5조) 대비 낮추며 발행량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최대 100조원)으로 인한 추가 국채 발행으로 금리 상승압력이 확대될 소지
 - '21년에는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보험사의 견조한 장기물 수요 등으로 발행이 소화됐으나, '22년은 글로벌 금리인상 영향으로 외국인·금융사 매수세 약화 전망
- 시중금리는 1.50% 수준의 기준금리를 선반영 중이나, 국내 구조적 물가 상승과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영향으로 추가적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존재
 - 11월 CPI(YoY)/1년 기대인플레(%): 3.7('11.12월 이래 최고)/2.7%('18.8월 이래 최고)
- 다만 미국 금리가 인플레이션 장기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국채 수요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외금리 상승 영향은 제한될 전망
- 이에 따라 '22년 국고 3년물 금리가 '21년 하반기와 같이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 나, 10년물의 경우 추정 등 수급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1.70%~2.10%, 2.10%~2.50% 범위로 전망

■ 크레딧 시장의 경우 비우량 회사채 등 한계영역을 중심으로 약세가 지속될 전망

- 크레딧물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관들의 평가손실이 확대되자 자금유입이 제한되고 스프레드가 급등했으며, 시장금리 안정 이후에도 약세 부각
- 특히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 지속 전망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안전자산 선호 강화는 여전채와 하위 신용등급을 중심으로 투자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
-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 축소 및 금리상승, 정책자금 회수 등 과정에서 비우량 크레딧을 중심으로 투자심리 개선이 제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주요 국채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동일 만기 국고채 대비)



자료 : 연합인포맥스

외환: 지연된 ‘회복’과 당겨진 ‘긴축’

윤 지 선 연구원(jisun.yun@hanafn.com)

연초 백신 보급, 코로나 불확실성 완화, 주요국 부양책 기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 회복 속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을 하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주요국 부양책 지연, 인플레이션 심화와 주요국 통화 긴축 전환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연말 1,190원 가까이 상승하였다. 22년에는 보다 코로나 종식에 가까워지겠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시계가 빨라지고 자산시장 디레버리징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원/달러 환율은 1,150~1,230원의 높은 레벨에서 변동을 보일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백신보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美긴축 기조 속에 상승세 지속

-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양호한 국내 경제 펀더멘털, 안정적 위안화, 주요국 부양책 집행 기대 등으로 1,100원을 하회(연중 최저가 1.4일 1,082원)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美테이퍼링 이슈 부각 등으로 1,130원대로 반등
- 하반기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중국발 리스크,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스탠스 강화 등으로 1,190원대로 상승하였으나(연중 최고가 10.12일 1,199원), 변이종에 대한 공포 완화 등으로 1,180원대로 반락
- 더불어 연중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 지속, 낮은 무역수지 흑자, 기업들의 달러화 보유 성향 확대 등 수급 환경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한편 외화자금시장에서는 '21.6월초 이후 스왑포인트(1Y)가 (+)권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풍부한 달러화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었음

■ [국제 환율] 코로나 종식이 지연되는 한편, 주요국 긴축 기조 강화로 신흥 통화 부진

- 달러인덱스는 글로벌 경제 회복 기대로 연초 약달러를 보였으나, 코로나 불확실성 지속, 美인플레이션 심화,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등으로 연간 6.8% 강세 시현
- 유로화와 엔화는 코로나 재확산, 부양책 집행 및 경기회복세 지연, 미국 대비 더딘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등으로 각각 연간 약 7.3%, 9.6% 약세
- 위안화는 헝가리 등 부동산 부채 리스크 발발, 원자재 가격 강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외국인 자금 유입, 양호한 경상수지 등으로 신흥국 통화 중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연간 약 2.5% 강세
 - 신흥통화는 코로나 장기화, 경기 회복 지연, 美긴축 기조 강화 등으로 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세(터키 -43.3%, 칠레 -21.8% 등)

■ 코로나 지속→공급망 왜곡 및 인플레 장기화→정책정상화 가속 및 디레버리징 우려 강화

- 달러화는 주요 선진국 대비 미국의 양호한 경기회복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점진적인 통화긴축 스탠스 강화 등으로 강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당초(21.10월) 백신 보급 및 코로나 불확실성 해소 후 ‘달러화-非달러화 통화 로테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이후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신흥국 경기 회복 지연, 앞당겨진 美긴축 시계 등으로 강달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수정
- 유로화는 미국 대비 부진한 경기회복세, 완화적 ECB 스탠스, 일부 취약 유럽국의 부채 문제 부각 가능성 등으로 약세 전망. 다만 코로나 및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시 EU경제회복기금 본격 집행과 더불어 약세 압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
- 위안화는 부동산발 경기 둔화 가능성,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완만한 재정 및 통화 확장정책 등으로 약세 전망. 그러나 금융시장 개방 기조下 외인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약세 압력을 일부 제한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코로나 종식 지연, 공급망 병목 및 인플레 심화, 주요국 정책 정상화 속 디레버리징 사이클 강화는 신흥국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 내년에는 취약국 신용스프레드 확대 및 신흥 통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

■ 지연되는 코로나 종식과 美연준 정책정상화 구도 속에서 1,150~1,230원 등락 전망

- '22년 원/달러 환율은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 양호한 대외 건전성 등 긍정적인 원화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기조 지속, 국내 성장 모멘텀 둔화, 비우호적 수급환경 등으로 21년보다 다소 높은 레인지의 움직임을 보일 전망
 - '22년 예상되는 비우호적 수급 환경 요인: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기조, 국내 증시 이익모멘텀 둔화 등에 따른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 유입 불확실성, 수출 증가율 둔화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 축소 등

■ 2021년 주요 통화 흐름



자료 : Bloomberg

■ Curve Flattening은 ‘경기확장기→수축기’ 전조 현상



자료 : Bloomberg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관망세로 인해 상승폭 축소

하 서 진 수석연구원(seojinha@hanafn.com)

'21년 매매 시장은 규제 영향으로 거래량은 낮게 유지되었으나 정비사업,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22년 매매가격은 규제 완화 기대감, 가격 상승기대가 견고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되었으나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상승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시장은 주임법 개정안 이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물량이 신규 물량으로 나오면서 가격 상승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 규제 영향으로 거래량은 낮게 유지되었으나 상승기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

- '21년 영향을 끼친 규제 정책(2.4, 7.10대책)으로 공공주도 공급사업지 내 신규 매입 시의 현금 청산 우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대로 인해 월평균 거래량 감소
 - 전국 주택 거래량(만호) : ('20.下)18 → ('21.上)15 → ('21.7~10월 평균)13
- 그러나 4.7 보선 이후 확산된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바탕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GTX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은 유지
 - 최근 고평가 우려 확산,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상승세는 둔화되는 추세
- 3기 신도시 등 공공주도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사전청약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주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준공물량 또한 감소하고 있어 수급불균형이 지속
 - 전국 주택 누적 준공물량(만호) : 42('19.10월) → 39('20.10월) → 32('21.10월)

■ 재건축,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유지되나 대출규제로 인해 상승폭은 축소

- '22년 매매시장은 가격 상승기대가 여전히 높은 지역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
- 하지만 '22.7월로 앞당겨진 차주별 DSR 3단계 규제, 가격 고평가 우려, 가계부채 강화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은 가격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차주별 DSR 규제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22.1월)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22.7월)
- 다만,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 서울시 내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어 규제 완화 속도에 따라 시장 내 매수심리가 다시 확대되어 가격상승에 영향 끼칠 가능성
 - 서울 2종 주거지 내 7층 규제 완화, 한강변 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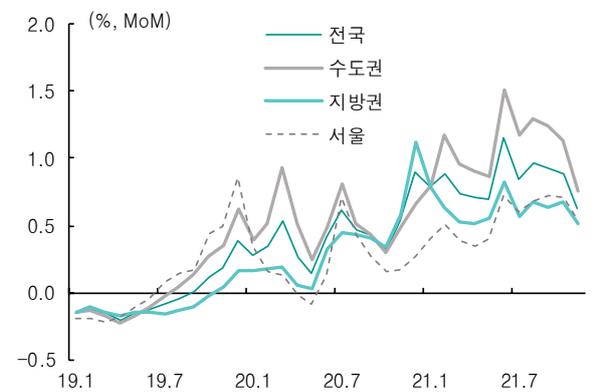
■ 주임법 개정안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한 결과, 월세화로 인한 임차인 주거불안정성 증대

- '22년 전세시장은 '20.7월 시행 후 최초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임대물량이 최장 4년간의 임대료 상승폭을 반영한 높은 가격으로 나오면서 상승압력 강화
- 대출 규제로 추가 자금 확보가 제약되며 전세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으나 임대시장 내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상승세는 유지될 전망
 - 전세수급지수(KB, 100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 164.8('21.10월) → 147.3(11월)
-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전세대출은 제외되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 전세대출 또한 규제될 수 있어 전세가격 상승폭 축소에 영향 끼칠 가능성 존재
-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전가되며 전세계약 대신 월세계약이 증가하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대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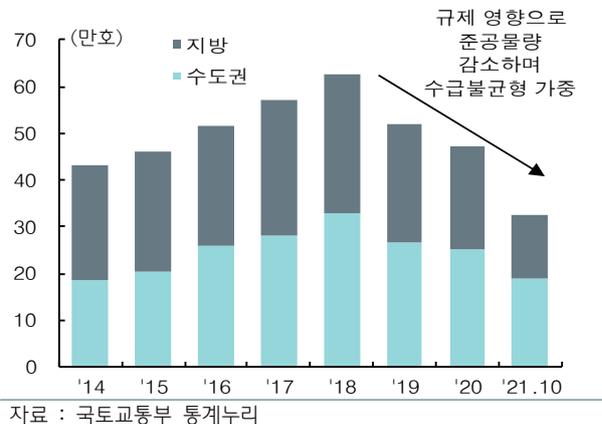
■ 대선 이전까지 관망세가 짙어지며 아파트 외 주택의 가격 상승폭도 축소될 전망

- '22년 부동산 시장에 있어 주요한 분기점 중 하나는 3월로 예정된 대선으로, 대선결과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된 규제 기조가 유지 또는 전환될 가능성
 - 재건축 규제로 수급불균형이 가격상승의 배경으로 대두된 현재,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공급을 부동산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
 - 또한, 증대된 세 부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 양도세, 종부세 부담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시사
- 그에 따라 '22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를 바탕으로 거래량은 낮게 유지되며 가격 상승폭 또한 서울 외곽지역, 지방권에서부터 둔화될 가능성 존재
- 또한 아파트와 함께 가격 상승폭이 동반해서 확대되었던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가격 상승폭이 축소될 전망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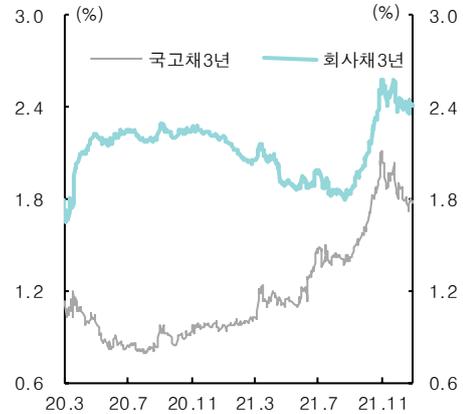
■ 주택 준공실적 추이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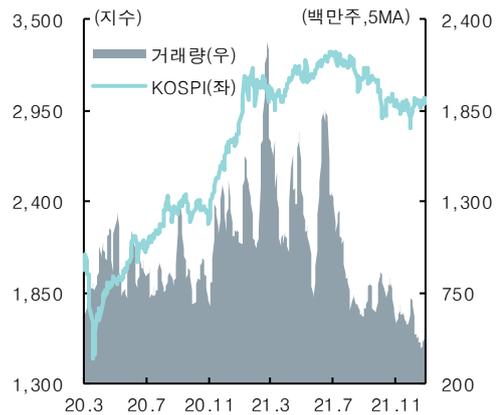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19년말	1.39	1.53	1.49	1.94	1.36	1.48
'20년말	0.61	0.66	2.21	0.98	1.36	1.48
11월말	1.07	1.26	1.65	2.37	1.80	2.01
12월 23일	0.99	1.27	1.66	2.44	1.81	2.01
12월 24일	1.01	1.27	1.65	2.44	1.80	2.00
12월 27일	1.03	1.28	1.65	2.41	1.78	1.99
12월 28일	1.03	1.28	1.66	2.42	1.79	1.99
12월 29일	1.04	1.28	1.65	2.41	1.78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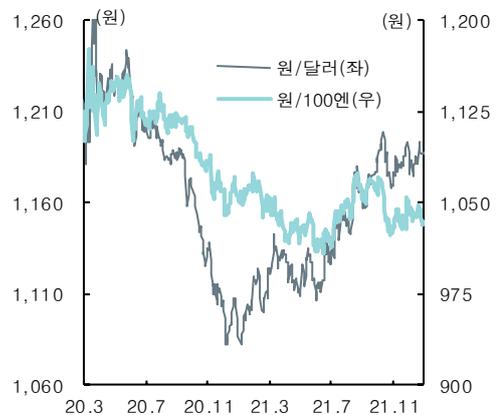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19년말	2,197.7	41,136	416	-3,404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11월말	2,839.0	198,523	984	-1,340
12월 23일	2,998.2	93,196	484	2,351
12월 24일	3,012.4	85,835	538	1,950
12월 27일	2,999.6	82,804	475	516
12월 28일	3,020.2	120,969	607	4,528
12월 29일	2,993.3	109,087	546	-1,278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19년말	1,156.4	1,064.2	166.0	1,297.1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11월말	1,187.9	1,051.0	186.6	1,347.2
12월 23일	1,187.9	1,038.2	186.4	1,346.4
12월 24일	1,186.6	1,037.3	186.3	1,343.0
12월 27일	1,186.8	1,032.7	186.2	1,344.3
12월 28일	1,188.0	1,034.6	186.5	1,343.6
12월 29일	1,186.5	1,031.9	186.3	1,3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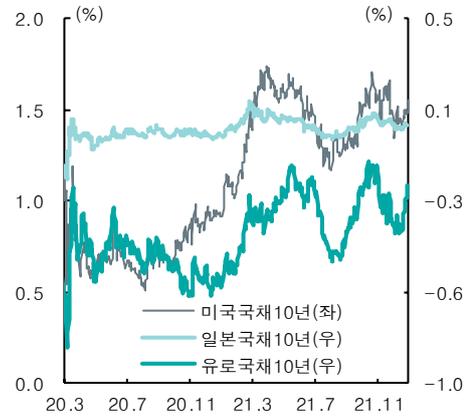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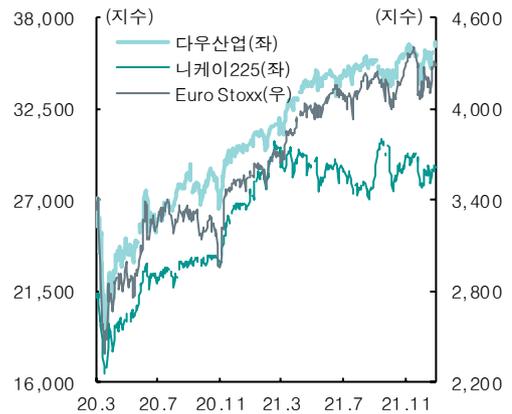
금리

	미국			일본 국채10년	유로 국채10년	
	FFR	리보(3월)	국채2년			
'19년말	1.55	1.91	1.57	1.92	-0.01	-0.19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11월말	0.08	0.17	0.57	1.44	0.06	-0.35
12월 23일	0.08	0.22	0.69	1.49	0.07	-0.25
12월 24일	0.08	0.22	0.69	1.49	0.07	-0.25
12월 27일	0.08	-	0.70	1.48	0.06	-0.24
12월 28일	0.08	-	0.75	1.48	0.06	-0.24
12월 29일	0.08	0.22	0.75	1.55	0.06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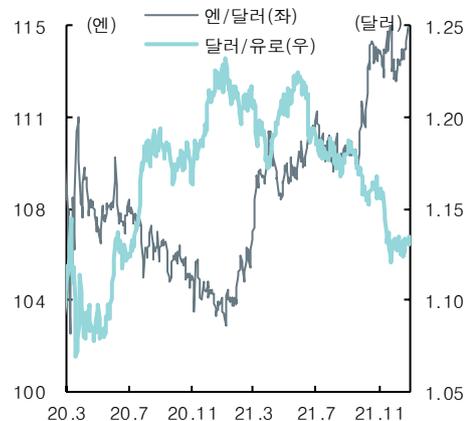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19년말	28,538.4	23,656.6	3,050.1	3,745.2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11월말	34,483.7	27,821.8	3,563.9	4,063.1
12월 23일	35,950.6	28,798.4	3,643.3	4,265.9
12월 24일	-	28,782.6	3,618.1	4,255.0
12월 27일	36,302.4	28,676.5	3,616.0	4,288.0
12월 28일	36,398.2	29,069.2	3,630.1	4,311.9
12월 29일	36,488.6	28,906.9	3,597.0	4,284.8



환율/상품

	환율		상품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19년말	108.66	1.122	67.3	1,523.1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11월말	113.03	1.134	66.4	1,776.5
12월 23일	114.38	1.133	73.5	1,811.7
12월 24일	114.36	1.132	74.4	-
12월 27일	114.88	1.133	-	1,808.8
12월 28일	114.81	1.131	76.5	1,810.9
12월 29일	114.97	1.135	76.9	1,805.8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호 신년 특집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1년 12월 31일 인쇄

2022년 1월 3일 발행

발행인 박성호

편집인 김영준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www.hanaif.re.kr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2권 1호 신년 특집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